

매스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Mass communicator's Obligation to Truthfulness

고 민 수(Ko, Min Su)*

ABSTRACT

Mass communicator serves as a information provider performing circulation and provision of diverse informa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large scales for the segmented and divided mass society. This provides the necessary elements needed to develop one's own decisions for every member of a community as a information receiver that expresses their decisions.

The recipient of information can not but rely on the sources provided by mass communicators to make decisions. That is why a constitutional value order needs to be created to secure the functions of mass communication.

In addition, freedom of information also needs to be protected for the recipient of information. As noted by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mass communicators have a public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in the creation of healthy opinions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herefore mass communicators have the obligation to deliver objective and true information. It is, however, difficult to find any academic discussions on the "truth" requirement levied on the mass communicators in the korean jurisprudential field. but studies for that are stagnated at the view of person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is study if focused on the meaning of the truth obligation that is constitutionally levied on the mass communicators. At the same time the constitutional basis will be sought in regards to protecting freedom of information for the recipients.

Moreover, a critical analysis will be done on the content and limits of the truth obligation levied by the Broadcasting Act on broadcasters, subjects of mass communication that use frequency resources.

Based on such assessment, a improvement of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will be presented to protect freedom of information for the recipients.

key words :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보호, 진실의무, 진실의무의 한계

*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사관, 법학박사.

I. 문제 제기

2005년 11월 22일 문화방송의 간판 탐사보도(investigative reporting)¹⁾ 프로그램 「PD수첩」은 “황우석 신화의 난자의혹”을 방송했다.²⁾ 이후 황 교수 연구팀이 제공받은 난자와 관련된 의혹과 체세포 배아줄기 세포 연구의 진위여부는 온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적 파장은 시시각각 그 진폭을 더해갔고, 불과 이틀 뒤 황 교수는 연구에 윤리적 문제가 있었다며 스스로 공직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중사회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게 한 사건임에 틀림없다.³⁾

「PD수첩」의 보도는 제시된 사실 그 자체가 갖는 사회적인 파장뿐만

-
- 1) 사실은 진실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명제 하에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의 이면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는 보도방식을 뜻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 등의 부정 부패를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독자적으로 조사·취재하여 깊이 파헤쳐서 폭로하는 것으로서 영어로는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팅(investigative reporting)이라고 하는데, 이를 탐사보도 이외에도 조사보도·발굴보도 등으로 번역해서 쓰고 있다. 탐사언론(investigative journalism)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성행했던 폭로언론(muckraking)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객관주의가 터부시해 왔던 보도의 주관성을 재생시킨 것이다. 탐사보도의 성격을 가장 잘 말해주는 예로는 1974년의 워터게이트사건 폭로기사, 1976년 일본에서 활자화된 록히드사건 폭로기사,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인콰이어러지가 사법부의 부당한 인종차별을 폭로한 심층보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탐사보도는 사건의 본질을 보도할 수 있고, 긍정적 의미에서 정부당국에 자극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으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사회적 비리나 정치 스캔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또한 각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간의 경쟁 속에 심층보도의 과잉화로 다른 뉴스와의 균형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국언론재단 홈페이지 www.kfp.or.kr, 「매스컴용어사전」 참조.
 - 2) 황우석 교수 팀의 2005년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은 그 내부 구성원이었던 A씨와 B씨의 제보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이른바 「탐사보도」의 전형적인 유형에 속한다.
 - 3) 바로 이 기자회견이 열렸던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KBS, MBC, SBS 등 이른바 지상파 3대 방송사는 저녁 종합뉴스프로그램에서 모두 229건의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방송사별로는 KBS가 77건, MBC가 64건, SBS가 88건을 내보냈다. 보도관련 통계는 윤호진, “황우석 신화 무너뜨린 PD 저널리즘의 개가”, 「방송과 신문」 2006년 1월호(한국언론재단, 2006), 28면에서 인용.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선 「PD수첩」 제작진이 황 교수 논문의 진위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다. 「PD수첩」 제작진이 미국 피츠버그에서 김선중 연구원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황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검찰수사가 미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고지한 후, 인터뷰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⁴⁾ 다음으로는 이른바 ‘몰래카메라’의 사용이다. Y교수 등 취재원 대부분의 인터뷰가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취재과정에서의 ‘억압적’ 인터뷰, 그리고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몰래’ 인터뷰는 그간 언론학에서 취재윤리 문제로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법적인 관점에서도 취재 상대방의 명예 등 개인적 법익침해 차원으로 다루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러한 관점에서의 논의가 한창이다.⁵⁾ 그런데 취재윤리라는 도덕적 비난가능성 차원이나 취재 상대방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침해의 문제로 다루는 기존 논의의 틀로는 해결되지 않는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혹은 ‘의혹제기식’ 정보의 제공은 정보수용자인 국민들을 무척이나 당혹하게 하고 심지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mass communicator)는 대중사회에서 정보제공자(information provider)로서 개별 의사표현의 주체들 스스로 자신의 의

4) 이 같은 사실은 YTN이 2005년 2월 2일부터 11일까지 방송한 김선중 연구원과 단독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김 연구원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PD수첩팀이 황 교수를 죽이러 왔다” 등의 내용을 밝혔다. 김 연구원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MBC는 그날 밤 자사의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뉴스 데스크」를 통해 “취재진이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논란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를 현저히 위배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나중에 “YTN인터뷰는 황우석 교수가 불러준 대로 인터뷰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5) 이와 관련해 취재윤리와 공익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어 눈길을 끈다. 문재완, “취재윤리와 공익의 비교형량 필요-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 이론 적용은 무리”, 「방송문화」 2006년 1월호, (한국방송협회, 2006), 18~21면. 그러나 이익형량에 관한 모든 법이론이 비교대상간의 가치상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리라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의 문제를 과연 법익과 비교형량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사를 형성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달리 말하자면 개별 의사표현 주체는 정보수용자(information receiver)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자신의 의견형성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보호가 요구되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올바른 의견형성에 기여하여야 할 공적 책임이 부여된다.⁶⁾ 그리고 이러한 공적책임의 내용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는 객관적이고 진실된 정보를 전파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부여되고 있는 정보의 '진실성'요구에 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대중사회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기능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보호 관점에서 정보제공자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와 그 한계 그리고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해 試論적으로 구성·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등 관련 단행 법률상 요구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 특히, 방송주체의 진실의무의 내용과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공적 과제로서 진실의무

대중사회의 형성이라는 사회구조의 변화는 '말하는 자와 듣는 자' 내지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용자'라는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 의사소통구조' 내지 '정보제공체계'의 생성과 발전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비대칭 의사소통구조가 매스커뮤니케이션인 것이다.⁷⁾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활영역에서 국가와 의사표현자간의 관계는 二項對立的 構造를 갖는다. 따라서 국가의 간섭 및 침해의 금지는 곧 커뮤니케이션 자유의 보장이라는 명제가 성립된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6) BVerfGE 54, 208(219)

7)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으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형성과정에 관해서는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69~85면.

사물구조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영역에서의 구조와는 다르다. 국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부터 정보를 획득해 의견을 형성하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3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3각 관계’ 가운데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와 정보수용자 사이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이른바 ‘진실의무’이다.

1. 사회구조 변화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손 인쇄기’(hand-press)의 발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출판물의 보급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⁸⁾ 15세기 중반, 손 인쇄기의 도입은 필사본이라는 제작형식으로 인해 공급량에서 극히 한정되었던 “읽을거리”를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⁹⁾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인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등장을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다. 지배세력은 인쇄기를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도구로 여겼고, 따라서 이의 이용을 자신들의 엄격한 통제 아래에 두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⁰⁾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등장 즉, 인쇄기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

8) 인쇄기는 라인 계곡의 포도 짜는 기계에서 발전된 것이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사용한 것은 1440년이었다. 그 당시 그가 사용한 인쇄기는 글자가 하나씩 새겨져 있는 토막들을 한 줄로 연결해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 인쇄기의 틀은 나무로 짜여졌으며 그 틀 안에 글자들을 손으로 일일이 배열했다. 글자들이 배열된 표면을 들어올려 거기에다 잉크를 바른 다음, 나무틀 전체를 종이에 대고 누르면 인쇄가 이루어졌다. 그는 이 손 인쇄기로 한쪽에 42줄이 들어가는 성경, 일명 구텐베르크 성경이라 알려진 책을 찍었다.

9) 필사본의 경우 한 권을 만드는 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손 인쇄기를 사용하면서 두 대의 손인쇄기를 사용해 한달 안에 오백 권에서 천 권을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책세상, 2003), 49면.

10) 영국에서는 1275년 제정된 貴人誹毀法(De Scandalis Magnatum)의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여러 단행법률이 언론의 자유, 특히, 인쇄물을 통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법률위반 사건을 처리하던 성좌재판소(Court of Star Chamber)의 악명은 1641년 장기의회(Long Parliament)에 의해 폐지되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1641년 장기의회는 성청령을 폐지했다. 이로써 왕권에 의한 출판물의 통제는 무력화되고 1642년 하원은 이른바 ‘서명법’을 제정하였다. 서명법은 모든 출판물에 대해 저자의 이름과 동의

용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이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이다.

근대 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¹¹⁾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인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언론자유는 보장이 곧 바로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구분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등장은 후기 산업사회화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비로소 비롯된다.

산업사회, 기술과학사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등이 확산되면서 사회구조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재화의 생산과 분배는 다양한 사회적 하부체계(subsystem)에 의존하게 되었는데,¹²⁾ 이는 전문가집단과 그것을 바탕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산업 그리고 산업영역을 계획·조정 그리고 관리하는 국가의 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재화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매커니즘을 의미한다.¹³⁾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보공급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며, ‘정보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정보

없이 인쇄 혹은 재판을 발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왕권에 의한 출판물에 대한 통제체제의 붕괴가 곧 자유로운 출판을 의미하지 않았다. 의회가 왕의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의회는 1643년 허가명령을 통해 성청령에 포함되었던 모든 내용을 부활시켰다. 즉, 허가, 등록, 서명, 수입통제, 수색과 압수, 의회의 위원회명령과 출판공사에 의한 구금 권한 등이 다시 등장했다.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는 바로 이러한 의회의 ‘허가명령’에 대한 항의였다.

11) 16세기 정치적, 권력적 통일체로서 현상학적·선입헌주의적 기본유형으로서 시작한 근대국가는 19세기에 이르러 만개하기에 이른다. 근대국가의 헌법국가로의 발전과정을 이슨제(Isensee)교수는 정치적 급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국가권력의 독점을 통한 국민 상호간의 안전보장을 담당한 16세기 근대국가, 국가권력의 침해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과제를 수행하게 된 18세기 시민적 법치국가, 그리고 사회의 자유화와 산업의 발전, 시장사회의 위험에 직면해 인간의 존엄성과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과제로 한 사회적 법치국가 등 세 단계로 구분한다. J. Isensee /이승우 역, 「국가와 헌법」(세창출판사, 2001), 75면.

12) 사회적 하부체계는 예컨대, 환경관리체계, 경제체계, 의료체계, 교통체계, 예술체계, 교육체계, 사법체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하부체계는 더 작은 단위의 영역별 기능적 분화에 따라 예컨대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분쟁해결체계가, 사법체계 안에서는 형사사법체계와 같이 더 작은 단위의 사회적 하부체계로 기능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13) 이상돈·홍성수, 「법사회학」(박영사, 2000), 31면.

를 대량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대형 출판기업이 출현했다. 이는 개별 의사표현주체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줄로서 기능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유형의 등장을 의미한다.¹⁴⁾

요컨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이란 정보수용자의 의견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정보제공행위를 뜻하며, 이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행위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이한 일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행하는 의사표현행위로서 정보제공행위와 구별된다.¹⁵⁾

2. 의견형성자로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등장은 신문의 개념과 그 기능에 관한 인식에 전환을 요구한다. 19세기 초 공론의 장¹⁶⁾을 구성하는 의회나 정당 등에서의 연설과 논의들을 활자화하여 공표하는 의사표현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온 근대 초기 신문은 그 형식상의

14) 물론, 시민 개개인은 여전히 말하고 쓰고 펴내는 주체로서 개인적 의사소통을 행한다는 점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지위를 계속해서 갖는다. 그러나 의사소통과정에서 정보생산자로서의 지위가 강조되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시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보소비자로서의 지위 보장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15) 예를 들어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행위 혹은 블로그(Blog)를 통해 의사를 개진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매스커뮤니케이션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때문이다.

16) 여기에서 공론의 장(public sphere)이란 개념은 하버마스(Habermas)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론의 장은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시민들은 이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여론으로 수렴하여 국가에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의 접근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반면, 모든 특권은 배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민들이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의견을 표현하고 공표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는 가운데 일반적인 관심사들에 대한 논의가 성립된다면” 그러한 공론의 장에서 형성되는 여론은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즉, 공론의 장은 현실적 구체적 공간(sphere)이 아닌 이념적·추상적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J.Habermas, The public sphere, in A. Mattelart & S.Siegelaub(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1. Capitalism, Imperialism, 1961. pp.198-201.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¹⁷⁾ 신문발행 주체는 종래 정치적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며 이러한 수고에 대한 사례로 의회나 정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받아오던 思想新聞(Gesinnungspresse)내지 理念新聞의 發行人에서 광고를 수입원으로 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신문(Geschäftspresse)의 발행인으로 바뀌었다.¹⁸⁾ 이 같은 신문성격의 변화는 신문발행 주체의 기업화, 더 나아가 그 기업의 대규모화를 초래했고, 결국 시장에서 영세 신문발행 주체를 배제시켜 일부 신문기업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¹⁹⁾ 이로써 국가의 간섭과 침해로부터의 자유가 곧 ‘공론의 장’을 보장한다는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예정조화적 가설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²⁰⁾

분업화된 사회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신문기업은 정보수용자인 공동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사형성의 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는 意見傳達의 媒介者로서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意見形成者가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는 정치, 사회적 삶은 물론이고 경제, 문화, 스포츠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삶의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중개하는 중개자일 뿐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 있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의도하는 일정한 방향으로 정보 수용자들의 의견을 이끌어가는 의견형성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의견형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은 언론학에서 전개되고 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실증적인 조사

17) 우리가 일상어로 사용하는 신문이란 ‘신문지’(newspaper)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문의 개념은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넓은 의미에서 신문은 고대의 손으로 쓴 신문(필사신문)이나 벽보(벽보)를 포함한 사회적 대화 일체를 포함한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쓰는 신문이라는 말은 보도를 뜻하는 것으로 쓰인다. 좁은 의미의 신문은 신문지를 메시지 용기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신문은 신문지와 동일한 내용이 된다.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하), (세영사, 1983), 25면.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신문의 개념요소로 정기성과 계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임시로 발행하는 여러 형태의 유인물 내지는 전단도 신문에 포함시키고 있다.

18) 당시 여러 신문사의 편집인들은 종종 정당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하였다.

19) 한상범, 「기본적 인권」(정음사, 1985), 150면.

20) 한상범,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와 법구조”, 「사법행정」(1980), 21면.

와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구성하는 상징세계가 실제세계에 대한 정보수용자들의 인식, 가치 규범적 판단과 믿음에 영향을 준다는 ‘문화계발 효과이론’이 대표적으로 제시될 수 있다.²¹⁾ ‘문화계발 효과이론’은 ‘사회현실 구성이론’(social reality construction theory)의 일종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가지는 직접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사회현실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전달하는 정보에 의해 형성되는 간접경험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다. 즉, 현실에 대한 관점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관점에 따라 제시되며 다시금 여기에 기초해 정보수용자들은 자신의 의견, 확신, 행위방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여론형성관계에 관한 이론인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을 들 수 있다.²²⁾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이 이론에 따르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다양한 정보 가운데 어떠한 정보를 선택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부각해서 전달하느냐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정보수용자 각자가 스스로 정보 그 자체에 직접적으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주어진 정보에 대한 정보수용자들의 관심과 지식은 그 정보에 대한 욕구를 높게 만들어 결국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21) 문화계발 효과이론은 거버너(Gerbner)가 1969년 발표한 “Toward ‘Cultural Indicators’ :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논문에서 거버너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사회현실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공통개념이나 인식을 개발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공통인식이나 개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공통된 지식, 행위나 사건의 중요성, 행위나 사건을 조망하는 시각, 전달된 정보 속에 표현된 구성요소들 간의 장소적·논리적 연계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양식이나 한계조건까지 제시한다고 보았다. Gerbner, “Toward ‘Cultural Indicators’ :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 *in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Content*, 1969. 사회현실 구성이론의 일종으로서 문화계발 효과이론은 언어학에서의 의미론, 사회학에서의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그리고 인식심리학에서의 스키마(schema)이론과 그 이론적 토대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의제설정이론은 1972년 맥콤즈(MaCombs)와 쇼(Shaw)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MaCombs&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972, pp 176~187.

정보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관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노엘 노이만(Noelle-Neumann)에 의해 제시된 이른바 ‘침묵의 나선이론’이 제시될 수 있다.²³⁾ 이 이론에 따르면 비주류 의견을 따르는 사람들은 고립될 위험성이 있으며 따라서 침묵하는 성향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하는 잣대로서 작동한다는 것이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과 보편성이 부인되는 것에 대한 관점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수용자 개개인의 의견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이론을 통해 확인되듯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는 공동체내의 의견형성에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해 강한 공적인 기능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신문기업이 독과점화 되는 경우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가 제공되지 못함으로써 공동체내 의사의 다양성이 축소되거나 더 나아가 의사의 획일화가 초래될 위험성이 증대하게 된다. 또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주장’²⁴⁾하거나 ‘진실을 무시’²⁵⁾하는 경우 정보 수용자인 개별 의사표현 주체가 올바른 의견형성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개별 의사표현 주체가 향유하는 언론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국가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이 같은 위험을 예방할 것이 요구되며, 이는 관점을 달리해 보면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정보자유 보호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1) 정보 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

‘정보의 자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

23) 노엘 노이만은 한 전국지의 편집국에서 통신사가 제공한 100개의 정보 가운데 정작 전달하는 정보는 평균 3개에 불과하다는 실증적인 관찰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Noelle-Neumann, in Mestsäcker, Offene Rundfunkordnung, 1988, S. 496.

24) BVerfGE 61, 1(8).

25) BVerfGE 54, 208(219).

유를 의미한다.²⁶⁾ 개별 정보수용자의 의사표현의 자유는 이 같은 ‘정보의 자유’의 보장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손에 쥌 수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즉 정보 없이는 의견을 형성할 수 없고, 정보자유 없이는 의사표현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보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적 의미를 갖으며, 정보거부의 자유까지 포함한다.²⁷⁾ 즉, 개별 의사표현주체는 자신의 뜻에 반하는 이질적인 견해의 수용을 강요하는 어떠한 국가권력의 명령에도 복종할 의무가 없다. 다만, 국가는 개별 의사표현 주체가 정보자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情報源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을 지닌다.²⁸⁾ 이는 대중사회에서 개별 의사표현주체에게 보장되는 언론자유와 실질적인 보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로부터 개별 의사표현주체에게 특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情報源’이란 그 수를 예상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정보원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반 대중이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는 물론

26) 허영, 「한국헌법론」(박영사, 2005), 545면. 박선영 교수는 정보의 자유를 알 권리로 파악하면서 그 법적 성격에 관해 일차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갖지만, 사상이나 의견, 정보 등이 국가나 사회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조작되거나 검열되고, 오도되거나 감추어지는 경우에는 있는 실체 그대로를 알고 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포괄적인 기본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지에서 알권리는 자기와 관련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의미하는 ‘정보의 자유’나 ‘정보수집·처리권’ 등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한다. 박선영, 「언론정보법 연구-21세기 표현의 자유-」(법문사, 2002), 285면. 생각건대 정보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으로 이해한다면 실체 그대로를 알고 접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정보전달의 상대방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아닌 시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국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개인의 정보자유 실현에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국가과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는 기본권을 통해 부작위 요청을 받는 것만 아니라 기본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력 범위의 확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보호의무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권 이론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할 것이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보고 직접 사인에게까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논리적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7)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는 Hoffmann-Riem, Ak-GG, Art.5 Rn.95.

28) Degenhart, *Bonner Kommentar zum GG*, Art.5 Rn.278.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도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²⁹⁾

정보의 자유를 이와 같이 이해할 때, 개별 의사표현 주체가 향유하는 정보의 자유는 크게 두 가지 국면으로 전개된다. 하나는 국가와의 관계이며, 또 다른 국면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와의 관계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와의 관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국가는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수용자가 정보제공자인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부터 일관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³⁰⁾

이와 관련해 우선 정보 이용에 대한 대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정보 이용에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정보원への 접근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정도의 과도한 대가의 징수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³¹⁾ 특히, 방송의 경우 케이블 방송이나 위성방송 등과 같은 유료방송 수신요금의 결정과 관련해 이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도한 이용요금의 징수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 수집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본질적으로 어렵게 만드는데 이를 국가 스스로 조성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정보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에 배치되기 때문이다.³²⁾

29) 허영, 앞의 책, 546면.

30) 국가의 보호는 「방송법」 혹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같은 입법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입법 내용은 입법자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부터 그 지침과 한계가 설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일 교수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한계로 최소한의 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명령에 기속된다고 한다. 이준일, 「헌법학 강의」(홍문사, 2005), 547면.

31) 허영, 앞의 책, 546면.

32) 우리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수신료는 실질적으로 방송을 수신 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헌재결 1999.5.27. 98헌바70.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따를 경우 얼핏 공영방송의 재원이 되는 텔레비전 수신료는 이용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 수신요금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다른 별개의 요소가 고려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와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매스커뮤니케이션 효과에서 도출된다.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보수용자인 개별 의사표현 주체의 의견형성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그릇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올바른 의견형성이 보장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이른바 ‘진실과 검증의무’가 요구되는 것이다.

방송법 제6조 제4항에서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정보 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정보를 전파함에 앞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는 필수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정보의 수집은 기자 혹은 프로듀서 등 그 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뉴스통신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정보는 그 소속 종사자가 수집하고 조사한 자료에 의존한다.

진실의무는 이와 같이 수집된 정보를 정보수용자에게 전파함에 있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자신이 전파하는 정보가 진실한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는 도덕적·윤리적 성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로서 부여되어야 하는데,³³⁾ 이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밝히고 있듯이 자유 민주주의의 전체 구조 속에서 진실된 정보 제공을 통한 여론형성이라는 점에서 그

그러나 텔레비전 수신요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 일단 특별부담금이라고 보더라도 공영방송은 전파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공법상 영조물이고, 정보수용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텔레비전 수신료가 과다해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하지 않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인 텔레비전 수신요금의 책정에 있어서도 정보원에 대한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지 여부에 관한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33) 독일의 경우 독일 언론협회가 제정한 언론강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과 검증의무를 첫 번째 항목으로 선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 주의 언론법에서는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Soehring, Das Recht der journalistischen Praxis, 1990, S. 10ff.

필요성과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³⁴⁾ 정보수용자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을 때에만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는 개별 취재 대상이 된 당사자의 권익보호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를 위해 요구되고,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과제 혹은 의무를 부여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전기통신설비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형태인 방송의 경우 이러한 진실의무는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이는 인쇄설비를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인 신문과 달리 무선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그 설치 및 이용의 전제가 되는 전파자원이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유선전기통신설비의 경우 그 설치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도로 등 공물사용이 요구된다는 점 등에서 전기통신설비의 매스커뮤니케이션적 이용과 관련한 기본권의 성격을 자유권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구체적인 질서의 내용 역시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방송이 갖는 ‘기초 자원의 특수성 내지 그 이용의 특성’으로 인해 그 활동이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 내지는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목적에 기속되는 까닭이다.³⁵⁾ 다시 말해서 현재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者라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보장되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자신의 고유한 개별이익의 추구를 위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수용자가 올바른 의견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목적에 기속되는 한에서 권한의 행사가 허용될 뿐이기에 진실의무는 인쇄시설을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 비해 강화될 수밖에 없다.³⁶⁾³⁷⁾

34) BVerfGE 12, 113(130).

35)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쇄 모두를 동일하게 언론매체로 파악하는 ‘매체특성론적 접근방법’에서도 방송의 경우 다른 매체와 달리 보다 강한 제한이 가해진다고 본다. 생각건대 방송주체에게 보다 강한 진실의무가 요구되는 이유는 방송이 막강한 영향력을 갖은 매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방송이라는 전파자원을 매개로 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의 물적 토대인 전파자원 등의 특성에서 그 이용목적에 한계가 설정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매체선택권의 의미에 대한 고찰로는 고민수,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 논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비교공법학회, 2006), 235~261면.

36) 헌법상 보장되는 방송의 가치질서에 관해서 독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우선 방송의 기능 및 그 물적 토대에서의 특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이러한 입장에서는 헤렌킴제(Herrenchiesee)의 헌법초안 제7조 제1항에

3) 진실의무의 내용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는 공개된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밝혀진 실체를 전파할 것을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요구하는 것이다.³⁸⁾ 검증기준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전달한 정보의 출처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⁹⁾ 말하자면 국가기관이나 통신사와 같은 신뢰를 인정할 수 있는 출처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해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그 정보의 진실성여부에 관한 검증이나 자체 조사 없이 전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한 정보의 전파에 있어서는 정보수용자의 당해 정보에 관한 관심도에 따라 검증기준은 달라진다.⁴⁰⁾ 예컨대,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보의 경우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는 신속한 전파를 이유로 최소한의 검증의무가 요구된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검증의무 이행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정보의 전파에 앞서 전파되는 정보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서 “모든 사람이 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다른 의견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방송수신과 인쇄물에 대한 제한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인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을 보장함에 있다고 본다. Wieland, *Die Freiheit des Rundfunks*, 1984, S. 63ff. 이에 대해 방송을 출판 등과 같이 파악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주관적 권리를 강조한다. 이러한 견해로는 예컨대 Hain, *Rundfunkfreiheit und Rundfunkordnung*, 1993, S. 48. 생각건대 방송은 일반적 의사표현과 다른 매스커뮤니케이션이며, 또한 그 물질 토대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방송의 가치질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의 기능보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3항에서 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도 이러한 물질 특성뿐만 아니라 기능보장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7) 베트게(Bethge)교수는 따라서 이러한 방송이라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보장되는 각종 권한과 법적 지위는 민주주의, 사회국가원리 및 법치주의원리의 실현이라는 공적 과제와 관련된 “특별한 공적지위”라고 한다. Bethge, in: Fuhr(Hrsg.), *Das Recht der Neuen Medien*, 1989, S. 109.

38) Löffler/Wenzel/Sedelmeier, *Presserecht*, Bd. I, 1983, §6 Rn. 15.

39) 대판 1999. 1. 26. 선고 97다10215.

40) OLG Stuttgart, AfP 1990, 145(147).

의견청취를 들 수 있다.⁴¹⁾ 따라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노력을 행하지 않거나, 단순히 당사자의 의견이 진실전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추측이나 주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기간 내에 당사자와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신속한 정보의 전파가 요구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청취는 예외적으로 요구되지 아니한다.⁴²⁾

진실의무는 또한 표현의 객관성의무를 포함한다. 표현내용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객관성 의무 이행여부는 어떻게 판단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증명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⁴³⁾ 이에 따르면 정보수용자에게 이론적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가 전달되었는가를 하는 요소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황우석 교수가 실험용 난자를 제공받으면서 「생명윤리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의 정보는 증명이 가능하다. 반면 ‘황우석 교수가 이른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사이언스’논문 실린 내용이 중대한 조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정보는 추측 혹은 주관적인 평가의 제시일 뿐이지 증명될 수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터뷰와 같은 개인의 견해를 전파하는 경우에도 증명이 가능하다. 견해를 나타내는 인터뷰는 그 개인이 그러한 견해를 밝혔는지, 그리고 그 인터뷰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전파된 정보내용의 객관성 여부가 검토되어 질 수 있다. 물론, 사전에 녹음을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편집자가 전체적인 내용과 왜곡되게 인용 혹은 편집하여 방송하였는지가 검토될 수 있고, 인용이 현저하게 부정확하거나, 왜곡되어 편집되었거나 하는 경우 객관성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4) 방송주체의 진실의무 위반관련 조치 및 문제점

「방송법」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전파되는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후심의”를 통해 당해 프로그램의 중지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것이다.⁴⁴⁾ 다만, 객관

41) BGH, AfP 1988, 34 ; OLG Stuttgart, NJW 1972, 2320.

42) OLG Stuttgart, NJW 1972, 2320.

43) Löffler, *Presserecht*, Bd. I, 1983, §11 Rn. 82.

44)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33조, 동법 제100조 등. 한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5조 제1항에서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의

성과 공정성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방송법에 의해 위임받은 ‘심의규정’에서 그 객관성 등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同語反覆’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의 보장이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볼 때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행정처분이 과연 정보수용자의 ‘정보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도 의문이다.

미국 항소법원은 ‘예일(Yale)방송국 사건’⁴⁵⁾에서 방송주체가 전파하는 정보에 대해 일정한 수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허가 신청’을 거부한 연방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수정헌법 제1조에 합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⁴⁶⁾ 즉,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방송주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전파자원의 이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법에서는 방송주체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제도’를 규정하면서도 이 같은 진실의무 위반과 연계시키지 않음으로써 전파되는 정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정보수용자의 언론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⁴⁷⁾

III. 진실의무의 한계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방송법과 달리 이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하한 강제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있다. 이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용이라는 물적 토대의 특성 및 차이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45) Yale Broadcasting Co v. FCC 478 F. 2d 594 (1973).

46)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파되는 정보의 내용과 관련해 방송주체에 대해 일정한 프로그램 수준(Program standard)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서는 경고, 벌금, 그리고 주파수 회수, 즉 주파수 이용권한의 취소 내지 재허가 취소를 명한다. Rivera-Sanchez, "How far is to far? The Line between offensive and indecent speech",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49, 1997, pp 327~366.

47) 방송주체의 진실의무는 「프로그램 기준」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다. 의견형성의 다양성보장의 구현을 위해 방송주체에게 요구되는 「프로그램 기준」은 미국의 경우 1927년 라디오법 제정 이후 판례를 통해 무선전파의 이용과 관련한 허가 혹은 재허가 심사기준으로 확립되었다. 고민수, 앞의 논문, 178~181면.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는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 검증의무 등 진실의무가 헌법상 부여된다는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특히 방송주체의 경우 이러한 진실의무는 정보수용자의 올바른 의견형성이라고 하는 헌법상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에 기속되는 한계 내에서 전파자원 등에 관한 이용권한의 행사가 보장된다고 보면, 진실의무 위반은 결국 권한행사의 중단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헌법의 規範力을 보장하기 위한 논리적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러나 전파자원 등에 관한 이용권한의 행사유지를 위한 진실의무 준수에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정보의 객관적 확인이라는 진실의무를 다하기 위한 검증의 방법 혹은 수단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로써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검증은 금지된다.⁴⁸⁾ 이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주관적이거나 왜곡된 정보의 전파를 통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정보의 취득 혹은 검증의 허용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 하여금 주관적이거나 혹은 왜곡된 정보를 생산할 개연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와 관련해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불법으로 수집된 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전파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보는 견해가 있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이른바 사회적 감시와 비판기능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⁴⁹⁾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우선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전파하는 경우 이로 인해 사적 비밀의 영역에 제3자가 침입하도록 부추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지적될 수 있다.⁵⁰⁾ 또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 스스로 형식적인 진실의무의 이행을 위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왜곡된 정보를 전파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는 그 기능보장과 관련해 정보원에 대한 접근에서 일정한 권

48) BVerfGE 66, 116(137).

49) BGHZ 80, 25.

50) BGH, NJW 1987, 2667(2669).

한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과 수단에는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⁵¹⁾ 이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이 결코 다른 헌법적 가치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헌법 규범에 대한 규범조화적 해석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PD수첩」과 같은 이른바 탐사 저널리즘과 관련해 형법 등에서의 금지규범에 의한 제한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⁵²⁾

1. 현행 개별법상 진실의무의 한계

이번 「PD수첩」 내용 가운데 중요 부분이 危害의 고지를 통해 지득한 인터뷰 내용과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취득한 정보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바로 이 점이 진실의무 한계 일탈의 문제로 검토되어질 수 있다.

문화방송이 황 교수의 논문조작 의혹에 관한 최초 제보에 대해 스스로 검증을 실시하고, 이러한 검증절차를 통해 확보된 정보를 정보수용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방송주체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진실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진실의무 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危害를 고지하거

51) 독일연방재판소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부정확한 인용이나 자의적인 편집에 의한 정보는 올바른 의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므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기능을 보호하는 보호영역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BVerfGE 54, 208(219).

52) Holzer, AfP 1988, S. 133 ; Kramp, AfP 1988, S. 114 ; Streffen, AfP 1988, S. 117.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와 달리 연방대법원은 빌트 발라프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의 절대적인 사용금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이른바 사회적 감시기능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GHZ 80, 25. 생각건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는 그 기능보장과 관련해 정보원에 대한 접근에서 일정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수단에는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이 결코 다른 헌법적 가치에 비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헌법 규범에 대한 규범적 조화적 해석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그 정당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취재의 상대방이 자신도 모르게 발언내용이 녹음·촬영되어 전파되는 것이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인가 아니면 적법한 수단의 사용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몰래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정보의 검증이 형법 등 다른 법률상 금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되고, 윤리적인 문제로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언정 진실의무의 한계로서 요구되는 타 법익의 침해라고는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이라고 평가된다면 이는 진실의무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고, 따라서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취득되거나 검증된 정보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1) 해악의 고지를 통한 정보 수집은 위법한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로써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PD 수첩」 제작진이 김 연구원에게 검찰수사를 운운하는 등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진술을 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강요죄의 위법성을 징표한다고 할 것이므로 진실의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진술의 신뢰성에는 당연히 의심이 가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2)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정보 수집은 위법인가?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정보 수집이란 대화내용을 대화상대방이 모르게 녹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침해 가능한 법익은 사적 비밀이다.⁵³⁾ 즉 사생활에서의 비밀 침해가 검토되어질 수 있다.

우선, 우리 형법 제316조는 비밀침해죄의 행위객체를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秘密侵害罪에 해당하는 행위는 개봉이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현행 형법상의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대화내용의 녹음은

53) 직접대화내용의 보호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이른바 ‘음성권’에 의해 보호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홍완식, “음성권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1999), 118면.

54) 이재상, 「형법각론」(박영사, 2004), 216면.

秘密侵害罪의 행위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녹음되거나 도청되어서는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자신이 행한 발언에는 그 發話者의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기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도달 혹은 전파되는 범위와 그 녹음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⁵⁵⁾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이 현대사회에 이르러 기술적으로 다양하게 행하여지는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⁵⁶⁾

그렇다면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정보 수집은 단지 도덕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에 그치는 것인가? 사적비밀을 보호하고 있는 또 다른 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면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규정하고 있다.⁵⁷⁾ 그런데 몰래카메라의 사용이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대화의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대화의 일방이 타방의 발언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에 관하여 처벌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대화비밀보호의 객체가 타인간의 대화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⁸⁾ 물론, 입법론적으로는 위의 지적대로 대화의 일방이 비밀리에 행하는 녹음도 침해 행위양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을 근거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정보수집 및 공표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대화비밀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양태를 볼 경우 대화자는 기자 등 인터뷰를 행하는 자와 그 취재 상대방인데 반해, 그 대화내용은 예컨대 카메라 맨 등이므로 기계적 설비를 통해 제3 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범죄를 ‘眞正身分犯’으

55) Hoyer SK §201 Rn. 3; Sch/Sch/Lenckner §201 Rn. 2; Schönemann LK §201 Rn.2.

56) 이재상, 앞의 책, 218면.

57)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 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홍완식, 앞의 논문, 128면.

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는 통신 내지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간의 통신이나 대화를 직접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경우 이외에도 그러한 녹음이나 청취에 관여해서 지득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⁵⁹⁾ 특히,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경우는 공범의 형태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현행법상으로도 마땅히 대화비밀침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발언을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녹화·녹음하는 행위는 발언자의 동의가 없는 한 ‘대화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되고, 따라서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진실의무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그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2. 진실의무 한계 일탈의 책임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진실의무 한계를 일탈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검증행위 내지 정보수집 행위는 결국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된다는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현행 「방송법」은 제5조 제3항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라는 표제 하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주체에게 부여되는 진실의무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 32조에서는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주체 등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 즉, 진실의무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방송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입법자는 방송주체의 진실의무 한계 일탈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진실의무 위반과 동일한 책임추궁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방송주체가 진실의무 한계를 일탈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수집한 정보를 전파한 경우 방송위원회가 그 한계일탈여부를 심의하고, 동법 제33조 제 2항 제11호에 따라 동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정을 명하거나 동법 제100조에 규정에 의한 시청자에 대해 사과 혹은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혹은 중지 등

59) 이와 유사한 견해로는 이정원, “도청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고찰”, 「형사법 연구」 제2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245면.

의 행정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공표된 정보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인정될 때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발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⁶⁰⁾

그런데 신문 등에서와 달리 방송주체가 진실의무의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⁶¹⁾ 하지만 이미 살펴 본 것과 같이 매스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방송은 그 ‘기초 자원의 특수성 내지 그 이용의 특성’으로 인해 활동이 일반 대중의 정보에 대한 욕구 내지는 의견형성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목적에 기속된다. 따라서 진실의무 한계 일탈에 대한 책임은 인쇄시설을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요구되는 그것에 비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 내지 ‘재허가 취소’ 등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입법자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영역에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가 위협받을 때 보장의무를 지는 것이며, 기본권적 가치실현을 위한 구체적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입법자가 진실의무 한계 일탈에 대한 책임추궁의 수단으로서의 ‘허가 취소’ 내지 ‘재허가 취소’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건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혹은 너무 그 요건을 한정함으로써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기능보장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전파자원 등의 이용권한을 취소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원리에 따라 취소할 때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IV. 결 론

대중사회의 형성과 함께 등장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은 사회적 하부체계의 기능적 한 부분으로서 “정보제공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후기 산업

60)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른바 ‘발행정지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61) 신문 등의 경우 현행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 21조 제2항에서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법원에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에서 개별적 의사표현의 기본권 주체는 한편으로는 정보수용자로서의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별적 의사표현주체의 언론의 자유는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진실되고 객관적인 정보의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질서를 형성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특히 이는 입법자의 과제인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요구되는 진실의무는 이러한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보호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다.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파할 경우, 정보수용자는 올바른 의사를 형성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객관적이고 균형되며 긍정적인 정보를 전파하여야 하는 진실의무가 요구되어 지는 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 뿐만 아니라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실현을 위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방송주체에게 부여되는 진실의무는 신문 등 인쇄시설을 이용한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에게 요구되는 진실의무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 방송이 갖는 ‘기초 자원의 특수성 내지 그 이용의 특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그 구체적 질서를 형성함에 있어서 그 입법형성의 원칙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까닭이다. 말하자면 방송주체의 진실의무는 방송의 기능을 촉진시키는 요소로서 파악되는 것이지 제한의 요소로 파악될 수는 없다.⁶²⁾ 바로 이 점에서 방송과 신문에 있어서 진실의무를 규정하는 입법의 성격에 관한 핵심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방송관련 법률에서 객관성 의무 등 진실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아닌 기본권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형성적 입법으로서 기본권 제한입법과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방송주체의 진실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에 관한 입법의 위헌성 심사는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 방송주체의 기능 보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를 입법자가 형성하지 않은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⁶³⁾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방송관련 질서형성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 법률’에 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그 허용여부가 정해지는 기본권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라고 할 것이다.⁶⁴⁾

62) Berendes, *Die Staatsaufsicht über den Rundfunk*, 1973. S.51

63) BVerfGE 49, 89(126).

따라서 우리 현행 방송법이 공적 책임이라는 표제 아래에서 방송주체의 진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야지 매스커뮤니케이션 주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입법의 한계와 결부시켜서 이해하고자 하는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이는 방송주체가 갖는 지위와 권한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방송법이 진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기속적 한계를 넘는 방송주체에 대해 전파자원 등의 이용 권한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규범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정보수용자의 정보자유보호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능보장을 위해 진실의무 위반 혹은 진실의무 한계 이탈에 대한 책임추궁 방법으로서 전파자원 등 매스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조속히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 고민수, “방송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_____, “방송사업허가제의 정당화 논거에 관한 비판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비교공법학회, 2006)
- 문재완, “취재윤리와 공익의 비교형량 필요-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 이론 적용은 무리”, 「방송문화」 2006년 1월호, (한국방송협회, 2006)
- 박선영, 「언론정보법연구-21세기 표현의 자유-」 (법문사, 2002)
- 배식한,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2003)
- 윤호진, “황우석 신화 무너뜨린 PD저널리즘의 개가”, 「방송과 신문」 2006년 1월호(한국언론재단, 2006)
- 이상돈·홍성수, 「법사회학」 (박영사, 2000)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 이정원, “도청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적 고찰”, 「형사법 연구」 제24호, (한국형사법학회, 2005)
- 이준일, 「헌법학 강의」 (홍문사, 2005), 547면

64) BVerfGE 57, 295(321); 95, 220(235).

- 차배근, 커뮤니케이션학개론(하), (세영사, 1983),
 한상범, 「기본적 인권」 (정음사, 1985)
 _____, “미국에 있어서의 언론자유 의 법구조”, 「사법행정」 (198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홍완식, “음성권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한국공법학회, 1999)
 Bethge, in: Fuhr(Hrsg.), *Das Recht der Neuen Medien*, 1989
 Berendes, *Die Staatsaufsicht über den Rundfunk*, 1973
 Degenhart, *Bonner Kommentar zum GG*
 Hain, *Rundfunkfreiheit und Rundfunkordnung*, 1993
 Isensee / 이승우 역, 「국가와 헌법」 (세창출판사, 2001)
 Gerbner, “Toward ‘Cultural Indicators’ :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 in *the analysis of Communication Content*, 1969.
 Habermas, The public sphere, in A. Mattelart & S.Siegelau(eds.) *Communication and Class Struggle*, 1. Capitalism, Imperialism, 1961
 Hoffmann-Riem, Ak-GG, Art.5 Rn.95.
 Holzer, AfP 1988
 Kramp, AfP 1988
 Löffler/Wenzel/Sedelmeier, *Presserecht*, Bd. I , 1983
 Löffler, *Presserecht*, Bd. I , 1983,
 MaCombs&Shaw,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2), 1972
 Noelle-Neumann, in Mestsäcker, *Offene Rundfunkordnung*, 1988
 Rivera-Sanchez, "How far is to far? The Line between offensive and indecent speech",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49, 1997,
 Soehring, *Das Recht der journalistischen Praxis*, 1990
 Streffen, AfP 1988,
 Wieland, *Die Freiheit des Rundfunks*, 1984

저자약력 : 고민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JTV 전주방송 보도국 기사를 거쳐 현재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헌법, 미디어법 등이다.